

충남리포트 제142호

ChungNam Report

2014. 11. 26.

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박정철

충남발전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 kcpark@cdi.re.kr

본 연구는 지난 11월 10일 한중 FTA 타결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파급 효과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중국주도 경제체제의 시대에 대응한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요 약

- 지난 11월 10일에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 협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이번 최종 협상은 경제적 협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협상에 가까움. 또한 “실질적 타결”이라는 의미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임
 - 둘째, 최대 관건인 농업부문에서 중국정부가 많이 양보한 것은 중국이 자유무역 경제협력체를 한국을 기점으로 동아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탄임
 - 셋째, 중국은 결국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하고,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자유무역경제 체제(FTAAP)를 구축해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을 아태몽(亞太夢)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중 FTA 타결은 단순한 경제적 득실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으며 지역발전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충남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과 일본 경제를 포섭하기 위한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협력체계를 면밀히 파악
 - 둘째, 중국 지방정부, 특히 산둥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가 및 성급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이 지역들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
 - 마지막으로, FTA 타결로 향후 양 국가 및 지역 간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충남도 차원의 중국 내방객 유치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CONTENTS

〈요약〉

1. 한·중 FTA 타결의 의미
2. 현황 및 쟁점
3. 위기와 기회
4. 충남의 대응 방안
5. 향후 과제

한·중 FTA 타결의 의미 ◀

01

- 한·중 정상은 2014년 11월 10일(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함. 이번 한·중 FTA 타결은 경제적 협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협상에 가까움
 -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것은 협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함
 - ※ 야당과 농민단체는 아직 협상과정이 남아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교적 절차와 관례를 무시하고 “실질적 타결”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성급한 태도라고 비판함
 - ※ 또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야당과 농민단체에게도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정부가 성급하게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한·중 정상이 서둘러 한·중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한·중 FTA의 최대 현안인 농수산물 관세철폐에 대한 합의가 엄밀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APEC 정상회담 시한에 쫓겨 체결했다는 점.
 - ※ 협상 타결 전까지 14차례 협상이 있었고 그 가운데 중국에서 8차례 진행됐음. 중국의 협상지역을 보면, 베이징(北京), 웨이하이(威海), 하얼빈(哈爾濱), 웨이팡(濰坊), 시안(西安), 쓰촨성(四川省)인데 이 가운데 웨이하이는 수산물, 하얼빈은 쌀 등 농산물, 웨이팡은 중국 최대 채소생산지, 쓰촨성은 주류, 절임채소 등이 유명함. 협상지역을 통해서도 중국이 얼마나 한국 농수산물 개방 확대에 집착했는지를 알 수 있음
 - 둘째, 원래 중국 주도로 한·중·일 FTA 협정을 추진했으나 최근 중·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자 중국은 우선적으로 한·중 FTA를 체결하고 일본의 참여를 관망하는 태도로 돌변한 점.

- 셋째, 한국 또한 G2로 부상한 중국시장을 일본보다 앞서 선점하기 위해 중국과의 우선협정 체결이 필요했기 때문임.

- 이번 한·중 FTA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농업부문은 정부측 주장과는 달리 향후 피해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이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금액으로 계산하면 3조36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정부가 집계한 농업피해액 8,150억 원의 약 4배가 넘는 액수임
 - ※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쌀 등 민간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의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잘된 협상이라고 평가하지만 중국산 농산품의 가격경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도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임.
 -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산 농산품에 대해 100-50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수산물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27.2%) 대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기존 FTA 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중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시켜 수출 가능성을 확대했다고 평가하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쌀과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쌀시장은 513% 관세율로 전면 개방하겠다고 WTO에 통보한 상태임
 - 이러한 관세율은 이후 WTO 농산물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가들의 압력으로 향후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임
 - 쌀과 고추, 양파 등 초민감품목 또한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가공품들은 관세가 철폐되어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심한 대비가 필요함

-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산업부문 영향평가를 보면, ‘대기업’의 경제영토는 확장된 반면, 영세중소기업에는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자동차 등 대기업 주력제품은 보호되고 금융 및 서비스산업의 진출에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
 - 하지만 협상 발효 후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 수에서 중국이 훨씬 유리해 향후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함

● 한·중 FTA 타결은 시작일 뿐 중국주도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체제에 대비해야 함

- 중국이 한·중·일 FTA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체제인 TPP에 적극 맞서고 나아가 2025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을 구상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역사문제, 농산물문제, 미국에 대한 의식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일본을 한·중·일FTA에 끌어들이는다면, 향후 한·중FTA → 한·중·일FTA → RCEP → FTAAAP로 확대 명실공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함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협정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 FTA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무역지대

● 문제는 한·중·일 FTA 타결을 대비해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경제를 포섭하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임

- 중국정부는 이미 2011년 국가급 프로젝트인 「산둥반도 남색경제지역 발전 계획」비준하고, 2012년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 시 FTA 관련 사항으로 산둥성에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 조성을 언급해 현재 산둥성정부의 비준으로 조성되고 있음
- 지방경제협력시범구는 7개 도시(칭다오靑島, 동잉東營, 옌타이煙台, 웨이팡濰坊, 웨이하이威海, 르자오日照, 빈저우濱州)이며, 인구 3,300만, 경제규모 2조5천억 위안으로 산둥성의 50.5%를 차지함.

※ 이 가운데 르자오시(日照市)는 충남 당진군과 자매결연 도시로 현재 한중자동차부품산업원

(汽车零部件产业园)을 조성 중이고, 빈저우시(濱州市)에는 한중현대농업원(现代农业园)이 조성 중임

● 하지만 영토분쟁 등으로 일본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정부는 산둥성정부와 협력해 한·중 경제협력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함.

- 이러한 배경으로 칭다오시는 산둥성정부의 비준을 받아 서해안신구에 ‘한·중자유무역협작지구’를 조성 중에 있고 한국과 가장 가까운 웨이하이시도 ‘한중자유무역지구’를 조성할 계획임

* 2014년 8월 칭다오시는 서해안신구에 상하이무역자유구 이후 두 번째의 국가 승인을 받은 ‘한·중자유무역협작지구’를 설립함. 여기에는 다섯 개의 구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블루베리, 찻잎, 식용버섯 등 고효율적, 생태적인 현대농업시범구역임.



〈그림 1〉 칭다오시의 중한무역협작구(좌), 웨이하이시 한악성(韓樂城)의 한국상품교역센터

● 현재 중국은 산둥성을 중심으로 대한국 경제블럭화를 통해 한·중 FTA, 나아가 한·중·일 FTA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한·중 FTA로 인한 농산물 통상의 위기와 기회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지역경제권 차원에서 중국주도 FTA 경제체제의 확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지방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산둥성 웨이하이시(威海市)정부가 참여해 협상 타결 후 ‘한중자유무역지구’를 건설해 대한국 경제권 포섭을 위

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웨이하이시(威海市)와 인근 옌타이시(煙台市)는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자 과수와 수산물의 생산이 풍부한 지역임

- 웨이하이시는 현재 도심지 중심에 대규모로 韓樂城(한국상품교역관, 문화관 등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코리아타운) 조성해 한국기업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 따라서 충남도는 중국농업 전체보다는 가장 인접한 산둥성 자유무역구의 발전 전략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중FTA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임.

● 따라서 한·중 FTA 타결에 따른 국내 대책 수립시, 세부 품목에 대한 영향 평가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대외경제정책 전략 수립에서 중국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체제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 필요

04

▶ 충남의 대응 방안

- 한·중 FTA 협상과 추후 기술적인 추가협상에서 지방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고 대책 또한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이나 산업부문의 세부 품목에 대한 대책보다는 지역 차원의 전략 마련이 우선임.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중국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및 성급 프로젝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충남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수립해 나아가야 함
 -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 4대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 발전규획에 대한 관심 필요
 - * 중국 연해안 지역 해양경제 관련 4대 국가급 프로젝트: 1)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 규획, 2) 저장(浙江) 해양경제 발전시범구 규획, 3) 광둥(廣東) 해양경제 종합실험구 발전 규획, 4) 푸젠(福建) 해협 남색경제실험구 발전 규획
- 둘째, 특히 산둥성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충남도와 각 시·군 차원에서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산둥성 칭다오시(靑島市), 웨이하이시(威海市) 등 7개 도시에서 한·중·일, 또는 한·중 자유무역지구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벤치마킹과 적극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
 - * 충남도는 현재 산둥성과 우호협력 관계이고, 서산시는 산둥성 룡청시(榮成市), 당진시는 르짜오시(日照市), 홍성군은 기수현(沂水縣), 태안군은 타이안시(泰安市)와 자매결연 상태이고, 천안시는 산둥성 웨이하이시 원딩구(文登區) 등과 우호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충남도와 각 시군이 산둥성과 각 지역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루트 등 역사문화자원과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대중국 관광인프라 구축 필요

- 서산시 대산항과 산동성 룡청시 룡연항(龍眼港) 간 여객선 취항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던 백제문화의 복원과 제주도와 서울시와는 차별화된 대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함
- 공주와 부여가 대일본 교류루트의 거점이었다면 당진, 서산, 태안, 아산 등은 대중국 교류루트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역사와 문화의 복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전략 필요
- 서해안지역 대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은 충남도뿐만 아니라 서해안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국가급 프로젝트를 만들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난 11월 10일 한국과 중국정부 간에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는 경제적 협상보다는 정치적 협상에 가까워 앞으로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음.
 - 이 때문에 상대국의 초민감품목 또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타결됨. 이 때문에 쌀과 고추 등 농업부문의 민감품목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됨
 - 또한 금융과 서비스업의 진출 기회를 마련해 향후 한류를 위시한 문화산업의 진출이 급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함
 - 하지만 지리적 인접성과 가공식품에 대한 양허가 대폭 완화돼 중국농산물 수입 여지는 많고 가격 경쟁력도 좋아 김치 등 중국농산품의 수입증가가 예상돼 향후 우리나라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영세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협상으로 평가됨
- 지자체 단위에서 한·중 FTA에 대응한 전략 수립은 산업별 세부 품목 보호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충남 지역발전 전략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중국의 동아시아 진출 전략,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전략을 인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지에 대한 분석 필요
 - 둘째, 산동반도 남색경제 발전 계획 등 중국 연해안지역 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와 발전 전략을 참고해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셋째, 충남도와 가장 가까이 인접한 산동성지역 7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혹은 한·중 자유무역지대 조성을 예의주시하며 이들 지역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한·중 FTA 타결로 상품교류 못지않게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문화와 서비스산업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또는 인근 서해안 지자체와 협력해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중국관광객 유치 및 홍보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함.



박 경 철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041-840-1206, kcpark@cdi.re.kr

◆ 참 고 자 료 ◆

김종철, 한·중 FTA 타결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시선, 오마이뉴스 2014. 11. 10 보도자료.

김지환·이재덕, 쌀 빠졌지만 중 농산물 한국식탁 이미 점령 ‘실효성 의문’, 경향신문 2014. 11. 10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4.11.10.,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어명근·이병훈·정대희, 2014.11,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맹맹, 2014.9, 중국, 칭다오서해안신구의 일부를 한중무역합작구로 승인, KOTRA 중국투자뉴스 제
410호.

주칭다오한국총영사관, 2013, 한중 지방경제협력시범구 추진 현황.

주칭다오한국총영사관, 2013, 산둥성 해양산업 현황과 협력기회.

충청남도(농산물유통과), 2014. 11.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도정 브리핑 자료.

中日韓自貿區談判已進行五輪共同難點在農業, 21世紀經濟報道 2014. 11. 10 보도자료.

2014년도 충남리포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효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응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2014-36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김홍기	2014.09.23
2014-37	충청남도 행복기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용현	2014.09.25
2014-38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안	변창흠	2014.09.30
2014-39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	안성호·곽현근	2014.10.02
2014-40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현 외	2014.10.08
2014-41	충남의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이충훈	2014.10.16
2014-42	충청남도와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박경철	2014.10.17
2014-43	농촌의 에너지자립,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	박춘섭	2014.10.30
2014-44	일본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4.11.06
2014-45	충남 지역 현실이 반영된 교통수요분석 DB 구축과 관리 필요	김형철·김원철	2014.11.12
2014-46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이해와 도입방안	김원철·유준일	2014.11.20
2014-47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양중	2014.11.26
2014-48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강마야	2014.11.26
2014-49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김종화	2014.11.26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